

 국무조정실 국무총리비서실	<h1>보도자료</h1>	2016. 1. 4(월)	
		작 성 문 의	국무조정실 개발협력기획과 과장 정은영 / 사무관 이희갑 (Tel. 044-200-2149)
			기획재정부 국제개발정책팀 팀장 정 한 / 사무관 고상현 (Tel. 044-215-7744)
		외교부 개발협력과 과장 윤상욱 / 사무관 김혜원 (Tel. 02-2100-8132)	
1월 3일 14시 이후 사용 / 국무총리실에서만 배포			

2016년 ODA 예산, 작년보다 612억 늘어난 2조 4,394억원

- 제23차 국제개발협력위원회를 통해 '16년 국제개발협력 종합시행계획' 확정
- 제2차 기본계획('16~'20) 및 4대 개발협력 구상*의 차질없는 이행을 위한 '16년 ODA 주요 정책방향 제시
 - * 모두를 위한 안전한 삶, 소녀들의 보다 나은 삶
보다 나은 삶을 위한 과학기술 혁신, 신농촌개발 패러다임
- 정부는 '제23차 국제개발협력위원회*'('15.12.24~12.28, 서면)'를 통해 「'16년 국제개발협력 종합시행계획」 등 2건의 안건을 확정하였다.
 - * 「국제개발협력기본법」에 따라 설치된 국제개발협력과 관련된 주요 정책을 심의·조정하는 기구로 정부위원 17명, 민간위원 7명 등 총 25명으로 구성 (위원장 : 국무총리)
- '16년 국제개발협력 종합시행계획*'에 따르면, '16년 ODA 총규모는 2조 4,394억원으로서, 어려운 경제여건 하에서도 '15년(2조 3,782억원) 대비 612억원 증가하였다.
 - * 당해년도 국제개발협력(ODA) 사업의 규모와 주요사업 및 정책방향 등에 관한 추진계획 (국제개발협력기본법 제11조)
- 이중 양자협력은 1조 9,479억원(유상 8,937억원, 무상 10,542억원)이며, 다자협력은 4,915억원 규모이다.

□ 지역별로는 아시아 중점지원 기조를 유지하면서 아프리카 지원을 확대('15년 17.1% → '16년 18.7%)하고, 분야별로는 교통·수자원·교육·보건 등을 중심으로 중점 지원할 계획이다.

* (지역별) 아시아 43.8% 아프리카 18.7%, 중남미 6.7%, 중동·CIS 5.5% 등
(분야별) 교통 13.3%, 수자원 11.0%, 교육 10.3%, 보건 10.2%, 에너지 9.5%, 공공행정 8.6% 등

□ 정부는 '16년 시행계획을 통해, 지난 11월에 확정된 제2차 국제개발협력기본계획에서 제시된 ODA 추진 원칙*별로 '16년 추진되어야 할 세부 과제를 제시하였다.

* (ODA 추진원칙) 통합적인 ODA, 내실있는 ODA, 함께하는 ODA

○ '통합적인 ODA'와 관련하여 '17년 시행계획 부터 국개위·주관기관에서 ODA 추진방향을 먼저 제시하고 이에 따라 각 시행기관이 사업을 발굴·기획함으로써 개별 ODA 사업의 정책부합성을 제고하기로 하였다.

- 국가협력전략(CPS, Country Partnership Strategy)을 올해말까지, 다자협력 종합전략을 올해 상반기까지 완료하여 양자·다자 ODA 통합 전략 수립을 마무리할 계획이다.

○ '내실있는 ODA'와 관련하여서는 기존 한국형 ODA 모델을 재정비하고, 개발협력 4대 구상에 부합하는 ODA 사업·모델을 적극 발굴·적용기로 하였다.

- 국제원조투명성기구(IATI) 가입('15.12월)에 따라 올해 중 국제원조투명성기구 기준 항목 중 13개 필수공개 항목부터 우선 공개할 계획이다.

○ '함께하는 ODA'를 위해 시민사회, 기업, 대학, 연구기관 등 민간참여 프로그램을 확대하고, 특히 재계와의 대화를 통해 ODA 사업과 CSR·CSV 사업 연계등 상호간 협력 방안을 논의해 나가기로 하였다.

* CSR : Corporate Social Responsibility(기업의 사회적 책임),
CSV : Creating Shared Value(기업의 공유가치 창출)

- 또한, 시장재원을 활용하는 개발금융 도입을 통해 ODA 재원 기반도 확충할 계획이다.

□ 이외에도 정부는 '15년 국제사회에 약속한 개발협력 구상 관련 사업을 차질 없이 계획·집행하고 이를 위해 국제개발협력위원회와 주관기관의 지원도 강화하기로 하였다.

안건1 '16년 국제개발협력 종합시행계획(안)

□ '16년 국제개발협력 사업 추진계획

- 약 2조 4,394억원* 규모, 총 44개 기관(지자체 12개) 1,230개 사업 추진
 - * '15년 대비 약 600억원(2.5%) 증가로, '16년 ODA/GNI 비율은 약 0.15% 추정
- 양자·다자간 비율 약 80:20, 유상·무상간 비율 약 46:54(예산기준)
- 아시아 중점지원 기조를 유지하면서, 아프리카 비중을 확대하고, 교통·수자원·교육·보건 등을 중심으로 지원

□ '16년 국제개발협력 주요 추진과제

제2차 기본계획의 추진방향('16~'20) 및 개발협력 4대 구상의 차질없는 시행을 위한 구체적 실행계획 수립

① 통합적인 ODA

- (시행계획 수립 절차 개선) 국개위와 주관기관이 제시하는 주요 추진방향에 따라 각 기관별 시행계획 수립·추진('17년 시행계획~)
 - * 각 부처 사업계획 취합방식(bottom-up) → 사업추진방향 사전제시(top-down)
- (2기 국가협력전략 확정) 24개의 중점협력국에 대한 국가협력전략(CPS)* 수립(~'16년말)
 - * 수원국 대상 중점협력분야, 분야별 지원방안, 중기재원계획 등 포함
- (무상 통합 전략 강화) 무상원조 관계기관 협의회(외교부) 산하에 4대 구상별 분과위를 운영, 구상별 전략적 분업·조율 실시

② 내실있는 ODA

- (ODA 콘텐츠 재정비) 한국형 ODA 모델 재정비 및 개발협력 4대 구상에 부합하는 ODA 사업·모델 발굴·적용(~16년말)
- (평가·환류 강화) 자체평가 결과에 대한 이행상황 반기별 지속 점검 및 평가교육 개편*을 통한 평가 역량 강화
 - * 단일 과정으로 운영되던 교육프로그램을 '16년부터 세분화(초급·중급)

- (원조정보 공개 확대) 국제원조투명성기구(IATI) 가입에 따른 정보공개 개시(~16년 중)
 - * IATI 기준 항목(38개) 중 13개 필수공개(mandatory) 항목부터 우선 공개

③ 함께하는 ODA

- (민간 파트너십 다양화) 재계와의 대화를 개최하여 지속가능개발 목표, 개발협력 4대 구상 등 개발아젠다에 대한 협력 방안 논의
 - * 베트남 고추재배, 에티오피아 IT 관련 직업훈련 등 성공사례 모델화·확산 추진
- (다양한 민간재원 활용 확대) 시장재원을 활용하는 개발 금융 도입을 통해 ODA 재원기반 확충
 - * 개발금융 도입시 구체적 운영방안에 대해서는 국개위 상정·논의
- (범국민 이해와 참여 증진) 사회·전문교과 교과서에 ODA 내용을 차질 없이 반영하고 ODA 관심 청년층 대상 참여 기회 확대

④ 개발협력 구상의 차질없는 시행

- (모두를 위한 안전한 삶) 시에라리온, 라이베리아 등을 대상으로 국가 실험실체계 강화 등 국가 감염병 예방 대응 체계 강화 추진
 - * 제2차 글로벌보건안보구상 서울 회의('15.9월) : 향후 5년간 1억불
- (소녀들의 보다 나은 삶) 코트디부아르, 필리핀, 우간다 등을 대상으로 개도국의 소녀대상 교육·보건·직업역량 강화 등 추진
 - * 유엔개발정상회의('15.9월) : 향후 5년간 2억불
- (보다 나은 삶을 위한 과학기술혁신) 베트남, 팔레스타인 등을 대상으로 정책·제도수립 역량 강화, 연구개발 지원 등 추진
 - * 유네스코 특별연설('15.12월) : 향후 5년간 2억불
- (신농촌개발패러다임) 우리의 경험을 바탕으로 개도국 여건과 현실에 부합하도록 보편화·현대화한 21세기형 농촌개발 모델 정립·확산

① 국가협력전략(CPS) 종료평가 연구결과

- 2기 CPS 수립에 앞서 기존 1기 CPS 평가(베트남, 동티모르)를 통해 CPS의 전략기능 강화 및 이행관리 체계 도입 등 개선점 도출

② 미얀마 ODA 사업 종합평가

- 미얀마에서 추진중인 ODA 사업 실태를 종합 점검하여 원조 강화, 사업발굴단계부터 유·무상 연계 추진 등 개선방안 마련

③ 우리나라 ODA 사업의 국내파급효과 평가

- 일정부분 긍정적 효과를 확인하였으나 통계 및 사례 축적 한계 및 기타 변수 영향 등을 고려하여 ODA 효과의 지속성 및 방향성에 대해서는 신중한 판단 필요

④ 대규모 프로젝트 사후관리 실태 평가

- 사후관리 실태 분석을 통해 사업단계별 사후관리 필요성 점검 및 표준화된 사후관리 지침 마련 등 개선점 도출